

다산포럼

자기 표절과 양심



송재상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근혜 정부는 이끌어갈 새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인사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어느 때나 그렇듯이 이번 인사 청문회에도 본인 및 아들의 병역 문제, 부동산 보유와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이 단골 메뉴로 올랐다.

막중한 국사를 수행해야 할 인물들의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학교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의 논문 표절은 더욱 절저히 겸증되어야 마땅하다.

‘표절(剽竊)’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시가(詩歌), 문장 등의 설(說), 또는 글귀를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발표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세운 학설이나 그 사람의 글을 몰래 가져와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은,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친 물건을 자기 물건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이는 분명 절도 행위이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도 표절을 가장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멀지 않은 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0여 년 전에 발표한 논문 한 편이 표절임이 판명되어 스스로 사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표절은 학자로서 가장 파렴치한 행위로 여겨진다.

표절은 옛날에도 있었다. 고려의 문호 이규보(李奎報)는 ‘아홉 가지 짓이 않은 글’을 열거하는 가운데 ‘홀로 이금체(拙劣易擫體)’ 즉 ‘홀렬한 도둑이 쉽게 붙잡히는 글’을 두 번째로 꼽았다. 이것은 옛 사람의 글을 표절하다가 쉽게 단로나는 글이라 뜻이다.

이규보도 표절하는 자를 ‘도둑’이라 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송지문(宋之間)은 사위가 죽은 시가 미움에 들어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위가 끝내 거절하자 사위를 몰래 죽이고 그 시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것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 살인이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것은 이른바 ‘자기 표절’이다. 자기 표절이란 자신이 쓴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 가져다 쓰는 행위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청문회에서 거론된 자기 표절의 예를 들어 본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준에 자신이 발표했던 논문 2개의 본문 내용 4곳과 연구 데이터 7개를 자기 표절했다고 질타했다. 이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도대체 ‘자기 표절’이란 용어부터 부적절하다. 표절이란 문자 그대로 도둑질하는 것인데 자기 글을 자기가 가져다 쓴 것을 도둑질하다가 쉽게 단로나는 글이라 뜻이다.

질이라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연구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제복만 바꿔 중복 게재한다면 이는 표절 시비를 떠나서 학자적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지만 한 논문의 논지 전개에 필요하다면 비록 자신이 썼던 논문이라도 그 일부를 다시 가져다 쓸 수 있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논문이라도 출처를 밝힐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다산(茶山)이나 퇴계(退溪)의 글을 읽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의 글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인(仁)에 대한 다산의 독창적 견해는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오늘의 자대로 보면 다산도 자기 표절을 한 셈이 된다.

나는 청문회를 거쳐 공직을 맡을 가능성에 전혀 없는 사람이다지만 만일 내가 청문회장에 선다면 자기 표절을 한 학자로 물매를 맞을 것이 틀림없다. 생각만 해도 도둑질하는 것 자체로도 한 쟁점이다.

떨어져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시설의 경우 분산보다는 집적화(集積化)를 통한 유기적·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광주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RDF시설이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상황은 라라진다.

의료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RDF시설마다 밀어붙인다면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뿐이다. 물론 광역매립장의 경우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 반경 2km로 한정해 그 외의 지역은 안 된다는 건 감정의 골을 깊게 할 뿐이다.

광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되, 보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자신의 동네 앞으로 매일 쓰레기 차량이 오고 가고, 매연과 악취가 풍기는데로 다수를 위해 희생하고 한다면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교통칼럼

도로에서 필요한 ‘자율적 사고(思考)’



김운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장

수많은 보행자가 길을 걷고 건너며 버스를 기다린다.

보행자 중에는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어린 아이부터 이쁜 아침 학교를 등교하기 위해 보행하는 어린이, 고령자까지 다양하다. 자동차가 편안하게 달려야 하는 도로에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구호를 간혹 길거리 흥보들에서 만날 수 있다.

막연하게 접하는 그러한 구호를 뒤로 한 채 중학생들의 담벼락 자동차운전자 모두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멀지 전 떠근 후 저녁 악속이 있어 악속장소를 찾아 운전을 하고 있다. 주행하던 도로를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차량 통행이 많아 지체가 되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됐다.

행렬의 앞 부분까지 이동을 했을 즈음 좌측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만나게 되면서 웬지 모를 불쾌감이 생겨났다. 직진 차로를 이용한 양체운전자로 인한 감정은 불쾌감을 넘어 적대감으로 변하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 자신만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

의 의지대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율적 행동이 아닌 ‘자유’에 근거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사전적 의미로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얹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소개된다.

전쟁터로 바뀐 상황은 한 운전자의 잘못 해석된 ‘자유’인 것이다.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다.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19회나 반복되어 명시되고 있다는데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인 자율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곳이 도로이다.

‘자율’은 ‘스스로 자기(自己)의 방종을 억제(抑制)함’으로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무한하지 않다. 한 개인의 자유가 무한하다면 도대수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한의 한 예가 작게는 즐거워야 할 흐르길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617

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편리한 도로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누구나 도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순 있다. 이는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는 3안(三安)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개인과 가정의 안전, 사회의 안정, 국가의 안보가 3안에 해당한다. 자신의 행위에 자율적 사고를 더하는 것은 자신과 가정의 안전을 위한 길이며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스스로 물고 담해야 한다. 진정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편리를 위해 무질책한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지를 말이다.

* * * ‘교통칼럼’은 광주일보와 광주교통방송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실시간으로 칼럼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2주마다 화요일 오피니언판에서 교통 전문가들의 격조 높은 칼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고

수질 개선, 오염총량관리 성공이 관건



주홍봉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 제재조치 해소와 관련하여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 극복을 교훈삼아 매년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도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과연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우리 지역은 축산농가 밀집지역이 많고,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아파트나 공장 등 오염원이 늘어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서 개별 오염원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농도 중심으로 관리하였다. 하지만 가

랑비에 옷 젓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지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전체량은 늘어나 결국 수질 저하는 물론 수생태계가 악화된다. 이는 곧 지역민의 피해로 귀결됨에 따라 오염총량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지자체별로 배출가능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해 3월 동 제도 도입 이후 5개 년 동안 지자체별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광역시, 나주시, 장성군 등 3개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제한받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처음 맞는 제재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밟 빠르게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새로운 오염물질 색감시설 발굴과 같은 오염물질 저감

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나주시는 올해 1월 전 지역이, 장성군은 지난해 12월 일부 지역이 개발 제재 조치가 해소되는 성과를 거둬 지역개발사업이 다소 탄력을 받게 되었다.

물론 광주시와 장성군 일부 지역은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 노력으로 올해에는 제재조치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토록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규모의 이상의 지역개발은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거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확대하여 삼킨 럭을 늘리면 그만큼 지역개발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지자체의 수질보전에 대한 노력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는 곧 자연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이며 동등적인 대응이 곧 지역개발의 지름길인 것이다. 아울러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복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으로 인해 영산강수계의 경우 2010년 오염물질(BOD) 발생량은 2002년에 비해 11%가 증가하였으나, 실제 배출량은 35%가 감소한 결과로 수질측정지점 중 86%가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기초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축산분뇨 처리, 하수 관리 정비 확대 등 다양한 오염저감사업이 시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제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전 대응노력 없이 제재조치 결과만을 두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는 제도 탓만 할 때는 이미 지났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일부 지자체는 이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이며 동등적인 대응이 곧 지역개발의 지름길인 것이다. 아울러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복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질 개선, 오염총량관리 성공이 관건

정부·지자체, ‘에너지 제로 주택’ 적극 지원해야

언젠가는 고갈 되고야 말 화석연료. 그리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이미 지구 온난화로 계절적인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겨울이 너무 따뜻하다는지, 아니면 이번 해처럼 혹한이 돌아오는지가 그렇다. 여름철에도 집중호우와 엄청난 장마, 혹은은 사상 최악의 가뭄이나 태풍 피해 모두가 지구의 기상이변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과 현상을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환경과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서도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게 전기와 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에너지 소비. 그에 따른 자원낭비 문제일 걸로 본다. 특히나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지나친 냉난방으로 블랙아웃을 걱정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하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전기 탓만 할 수도 없다. 전기료를 전혀 내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 제로 주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외부 지원 없이 모든 에너지를 자급 자족하는 에너지 제로 주택이 우리나라에도

업자들 모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열과 빛, 지열로 충당하고 공용으로 쓰는 용수는 빛물을 정화해서 쓰는 방식이다.

우리가 말로만 녹색도시, 그린시티라고들 말하지만 이런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것을 직접 실천하는 곳은 드문 것 같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인은 물론이거나 개인의 노력으로 경제적이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공공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섭·광주시 산간구 장덕동

社 說

환경시설 갈등, 주민 의견 수렴 전제돼야

광주시 남구 양파동 일대 주민들이 광역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시설 설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파동에만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의료폐기물, 목재폐기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4개의 처리시설이 모여있다는 점을 들어 RDF 반대 및 설치 저지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RDF시설이 들어서면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지하수를 오염시킬지도 모지라 대기오염으로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시설원예단지는 물론 주민 건강 까지 위협 받게 된다며 추가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RDF시설을 들어서면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지하수를 오염시킬지도 모지라 대기오염으로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시설원예단지는 물론 주민 건강 까지 위협 받게 된다며 추가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RDF시설을 들어서면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지하수를 오염시킬지도 모지라 대기오염으로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시설원예단지는 물론 주민 건강 까지 위협 받게 된다며 추가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범죄 무방비 상태라니

광주의 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도심 속의 빈민촌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범죄의 공포 속에 지내면서도 집단으로 사는 탓에 인근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따돌림까지 감수하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RDF는 광역매립장으로 인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으로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시설원예단지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상은 물론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지속 같은 삶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나 경찰의 안전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동으로 사كن과 함께 공동으로 살고 생활하는 공동체로 활성화되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여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지속 같은 삶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나 경찰의 안전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